

기자회견 자료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설립, 조사) 방해세력 명단 공개

2017년 10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416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목 차

I.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과정 개요	1
1. 특조위 설립 준비 단계	3
2. 특조위 구성 단계	4
3. 특조위 활동 단계	4
4. 특조위 강제 종료와 해산	8
II. 기관별 특조위 방해 세력 명단	10
III. 기관 구성원별 특조위 방해 행위 및 책임	18
1. 해양수산부	18
2. 해경	28
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29
4. 청와대	33
5. 국무총리실	42
6. 국정원	42
(참조1)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44
(참조2) 고발사주 고소장 사진	46
(참조3)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47
(참조4) JTBC 보도 기사	5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설립, 조사) 방해세력 명단 공개

I.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과정 개요

2016년 6월 30일, 박근혜정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이하 특조위) 강제종료 시켰다. 그러나 특별법이 보장하는 기간은 특조위가 조사활동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5월까지다. 특조위가 인적·재정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날이 2015년 8월이나,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 해수부 등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특별법 부칙 제3조를 들어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 특조위 존속 기간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 출범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종료일은 2016년 6월 30일이다. 특조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2015년 1월 1일을 활동 개시일로 해석하는 억지주장으로 2016년 6월 30일을 종료일로 확정하였다. 이를 빌미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특조위 조사관들은 특조위사무실이 폐쇄되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일상적인 근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해산에 무급출근투쟁으로 대응하였다. 2016년 10월, 특조위사무실마저 폐쇄시켜 출근투쟁조차 어려워진 조사관들은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바가 없다며 급여소송제기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이 불법임을 밝히려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특조위 조사관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공무원보수 지급청구'소송은 원고 승소를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위원회의 인적, 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 4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 강제 종료 이후에도 근무활동을 계속한 특조위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미지급금 지급 판결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특조위 종료가 불법적인 강제해산임을 법적으로도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설립단계부터 특조위 강제해산까지 지속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인 특조위 설립단계부터 여론을 호도하여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아세워 시작도 전에 특조위의 위상을 저하시켰고,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동안 정부기관, 언론, 보수단체를 동원해 노골적으로 조사방해를 자행했다. 특히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참사당일 행한 직무의 적정성’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했다. 조사대상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특조위의 강제해산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인 특조위 설립단계부터 여론을 호도하여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아세워 시작도 전에 특조위의 위상을 저하시켰고,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동안 정부기관, 언론, 보수단체를 동원해 노골적으로 조사방해를 자행했다. 조사대상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특조위의 강제해산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지난겨울, 시민들은 이를 방관하지 않고 촛불로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를 중심으로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일사분란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방해했던 정·관계 인사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중요 요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 부역자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혐의를 규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조사를 통해 그들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방해·은폐·왜곡한 과정은 ‘특조위 설립 준비’, ‘특조위 구성’, ‘특조위 활동’, ‘특조위 강제해산’ 네단계로 시기 구분하여 핵심 의혹과 조사대상을 선정 할 수 있다.

1. 특조위 설립 준비 단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특조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정부는 특조위 준비단과 유가족들과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밀어부쳤다. 이 과정에서 특조위법이 무력해 지고 조사범위와 권한은 축소되었다.

- ▶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안행부, 기재부와 예산과 인력규모를 상호 협의하던 과정이 전면 백지화되고, 주무부처가 안전행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뀜

- ▶ 시행령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세월호참사의 조사대상 기관임. 조사대상 기관이 특조위 직제와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결정
- ▶ 해수부가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준비한 '특조위 직제와 예산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2015.3.27.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5.6. 국무회의 통과, 5.11. 공포
- ▶ 해수부가 주도한 시행령은 ①진상규명국의 핵심보직인 선임 조사1과장을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 ②안전사회과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규정에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조사범위를 한정
- ▶ 특조위가 요구한 중요사항이 시행령에 제외함 ①업무의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규정(이로 인해 지휘권한의 행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계속 내부에서 충돌 발생. 사무처장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자신의 지휘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안팎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논란을 만듦) ②120명 정원에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별도로 한 규정

2. 특조위 구성 단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은 초기 협의과정에서 자체 조정되어 이미 상당한 삭감을 거친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폭 삭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인적구성도 의도적으로 늦춰 진상규명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 ▶ 240억원→198억원→159억으로 자체 조정해 최종 제출되었으나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89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조사사업비의 경우 45억 원 중 14억 원만 지급
- ▶ 2016년 예산은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 7,000만원 중 61억 7,000만원으로 요구액의 31%수준으로 삭감. 특조위 활동에 핵심 업무인 진상규명 예산은 6억 7300만 원으로, 이는 특조위가 요구한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
- ▶ 대통령은 위원회 종료시점까지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검증'도 마친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아 조사활동의 중요한 공백을 초래
- ▶ 시행령에 따르면, 2015. 11. 11. 부로 특조위 정원은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 되도록 정해져있었으나 추가 별정직 증원도 파견 공무원도 이에 상응하지 못함

3. 특조위 활동 단계

■ 특조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거부와 업무방해 사례

- ▶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당일 행적과 관계있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확보를 위한 특조위 실지 조사를 거부
- ▶ 특조위는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청)에 참사 당시 TRS(주파수공용통신)등의 음성파일이 해경통신서버에 100만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6년 5월 27일 관련 교신음성 저장장치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해경 측은 실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음

- ▶ 특조위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MBC 경영진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음에도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 특조위조사관을 고소
- ▶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선별적으로 응하거나 몇 개월이 경과하여 제출하는 등 비협조 하였고, 특조위의 수중선체조사를 위한 사전협조 요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하이셀비지의 반대로 인해 협조가 불가 통보. 특조위와 유가족의 '선체인양작업과정 현장모니터링 참여' 요청 묵살
- ▶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보안측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정보관에 대해 국정원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음
- ▶ 특조위는 청와대에 참사당일 국가안보실,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세월호 관련 업무지시와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국무총리실에도 정홍원 전 총리의 대국회 답변에 대한 참조(준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
- ▶ 특조위의 3차 청문회¹⁾는 정부의 예산 미지급과 조사거부로 인한 방해 속에서 진행

■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외압

- ▶ 해양수산부는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적정성-소위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의결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대응지침 문건을 작성. 이후 그 문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집단퇴장과 기자회견, 여당 국회의원의 속기록 제출요구,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특조위 비판 언론인터뷰 등이 이어졌음

- ▶ 2015년 11월 당시 이 문건이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파견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경위가 드러났으나²⁾ 정부는 해당 관계자나 기관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 ▶ 2017년 10월 12일 JTBC가 국회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함으로써 2015년 특조위 내 여당추천 위원들과 정부파견 공무원들에게 조사방해행위를 사주한 '해수부 문건'의 진원지는 청와대였음이 드러남. 특히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온갖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방해를 획책해 왔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음. 보도된 자료들은 2015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개시 전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하에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경제수석, 교문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이 특조위 성원 인선, 사건 조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활동과 4·16 세월호참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교조, 부산영화제 등의 단체 활동도 탄압했음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음.
- ▶ 당시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해수부 문건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

■ 민간단체를 동원한 특조위 활동방해

- ▶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른바 '실행팀'으로 지목 받고 있음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을 넘어 조윤선 정무수석까지 '관제데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던 문재인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자살방조'라는 여론을 조성하여 특별법 제정에 불리한 여론 조성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증언되었음
- ▶ 언론에 공개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2014년 4~11월)'에 따르면, 세

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2만원을 받는 탈북자 알바가 1,200명 이상 동원됐음.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2,500만 원 이상이었고, 한 집회에 최대 200여 명을 고용.. 어버이연합은 이 기간 동안 39회의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열면서 1,259명의 탈북자 알바를 동원³⁾

- ▶ 박영수 특검팀은 “2014년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전경련 회원사인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체 자금을 합한 약 24억원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15년에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특정 단체에 지원토록 했다”고 밝힘
- ▶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고 “돈을 지원해 주는 창구를 하나로 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폭로⁴⁾
- ▶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제향 군인회 등의 관변, 우익단체에 의한 특조위 청문회, ‘참사 당일 청와대 업무적정성’에 관한 특조위 의결 방해. 고엽제전우회는 자체운영하고 있는 엠블런스 차량을 수 십대 동원하여 특조위의 청문회 등을 방해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등도 특조위의 주요의사결정, 기자회견,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시위, 기자회견 등을 지속적인 방해

1) 2016.9.1(목)~9.2(금) 양일간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다. 3차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216.8.23. 보도 자료를 통해 “세월호특조위가 지난 2016년 6월 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1-9.30)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소섭외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초 특조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사학연금회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강당을 제3차 청문회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8월 5일 사학연금공단이 정한 대관절차에 따라 대관신청을 하였고, 9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0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대관을 위한 절차를 끝마쳤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11일 공단 측은 돌연 “공단 본부에서 청문회 대관 승인에 대해 말이 많다”, “부득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취해왔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4. 특조위 강제 종료와 해산 단계

정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 1년 6개월의 기산시점을 법이 시행된 2015.1.1.부터로 해석하여 2016.6.30.로 일방적으로 특조위의 조사종료를 선언하고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 ▶ 정부는 2015. 1.1.부터 조사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예산과 인력이 편성된 것은 7개월이 경과한 2015.8.4.에야 이루어짐. 그로인해 특조위의 실제 조사활동기간은 11개월도 되지 못한 채 강제종료
- ▶ 2017. 9. 8. 서울행정법원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고,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위원회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가 구비된 2015. 8. 4.로 인정하여 박근혜정부의 2016.6.30.일 특조위 종료 선언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었음을 판결

위의 내용에 따라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관련 조사대상 기관은 해수부, 청와대, 총리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특조위(당시 여당 추천 위원 및 파견직 공무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혹과 증거를 가진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다.

박근혜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못하게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명단에서 일부 인사는 조사방해증거가 명확하므로 검증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특검을 통한 강제력을 가진 수사보완, 추가수사 등 '진상조사'와 '기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회관'으로 압력이 행사됐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 2) 문건 작성자가 해수부 실장임을 확인한 기사가 추후 보도되기도 하였다. 뉴스타파, “청와대발 ‘특조위 무력화’...이젠 해체 수순?”, 2015년 12월 17일자, <http://newstapa.org/30811~>
- 3) “‘관제데모’ 워선, 조윤선 넘어 김기춘까지”, 시사저널, 1437호, 2017.05.02
- 4) “우파 대부 서정갑, 이병기 전 대통령 실장을 말하다”, 시사저널, 1386호, 2016.05.16

또한 조속히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기관과 관련자들을 조사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II. 기관별 특조위 방해 세력 명단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해 양 수 산 부	유기준	해수부 장관 (2015.3.16.~11.11.)	- 세월호 특조위 지원 담당부서 장관 -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석한 책임 -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석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2014.08) 해수부차관 (2014.8.4.~ 2015. 10.2) 해양수산부장관 (2015.11~2017.06.)	- 차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해수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한 태극의열단 오성택 대표는 '해수부 비밀 문건*'은 김영석 당시 해수부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증언함) - 장관 재직 기간 중 특조위를 강제폐쇄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박준권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장/ 선체처리기술검토 TF단장 (2014.11.27. ~2016.2.28.)	-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 검토'를 핑계로 5개월간 지연시켜 인양을 방해한 의혹. (해수부는 이미 4월에 유사한 기술검토를 진행한 바 있었음)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 심판원장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해양 수 산 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세월호인양 추진단장 (2015.1.7. ~2016.11.7.)	- 2015.11.19.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해수부 비밀문건' 소지.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장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2016.2.12.~미상)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세월호 후속 대책추진단 부단장
	이철조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 세월호인양 추진부단장 (2016.2.19.~미상)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세월호 후속 대책추진단장
	장기욱	세월호인양추진단 인양추진과 (2015.~미상)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 선체수습과장
해 수 부 파 견	김남규	설립준비팀장 (2014.12.15. ~2015.3.22)	- 설립준비단 초기파견자로서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준비단장(위원장) 허락없이 해수부로 복귀하여 설립준비를 방해 -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유보시킨 의혹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상임이사
특 조 위 공 무 원	임현택	운영지원담당관 (2015.3.23. ~2015.9.30)	- 보수단체(태극의열단) 대표를 사주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장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이상문	운영지원담당관/ 사무처장 직무대리 (2016.2.19. ~2016.11.16.)	- 2016년 6월 이후 청문회 지원, 인사지시, 기록이관 등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특조위 강제폐쇄 실행 책임	해수부 운영지원과장
	이시원	운영지원담당관/ 사무처장 직무대리 (2016.11. 17. ~2016. 12.)	- 2016년 11월 이후 특조위 홈페이지 폐쇄, 특조위 의결에 반하여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이관,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 등 특조위 강제폐쇄 실행 책임	해수부장관 비서실장
	정문수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201.3.23 ~2016.12.)	- 특조위 내부 문건을 해수부에 불법 유출한 책임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에 가담한 의혹	대변인 홍보담당관
해 경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2013~2015.07.) 해양경비안전조정관 (2015.12~2016.7.) 치안정감 (2016.7.~2017.07.)	- 참사 당시의 교신내용인 TRS(주파수공용통신) 등의 음성파일이 담긴 해경통신서버에 대한 특조위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실지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책임	해경차장으로 근무 후 퇴직 (2017. 7. 26. ~2017. 9. 18.)
특 조 위 위 원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15.3~2015.7)	- 특조위가 '세금도둑'이므로 해체해야 한다고 비난 후 사퇴 - 특조위-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공동 집필자 내부 자료 유출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공동 집필자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특 조 위 위 원	이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15.7~2016.2)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 - 특조위 내부자료 유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황전원	위원 (2015.1~2016.1)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대표 집필자	
	고영주	특조위 위원 (2015.3~2016.2)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공동 집필자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석동현	특조위 위원 (2015.3~2016.2)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공동 집필자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
	차기환	특조위 위원 (2015.3~2016.2)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공동 집필자	KBS 이사
청 와 대	박근혜	대통령 (2013.2.25. ~2017.3.10.)	-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 이를 감추기 위한 최초 상황 보고 문서 조작, 위기관리지침 불법 개정 등을 묵인하고 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 - 각종 조사 방해와 탄압행위 등 권력남용행위를 주도하거나 묵인한 책임	재판중
	김기춘	비서실장 (2013.8~2015.2.)	- 참사당일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비롯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	재판중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청 와 대			-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사후변경할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책임 - 기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에 명시된, 세월호 관련 각종 여론 조작, 피해자-시민 탄압, 특조위 구성 및 조사 방해 등 각종 공권력 남용 행위	
	우병우	민정비서관 (2014.5.~2015.1.) 민정수석비서관 (2015.1.~2016.10.)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	재판중
	조윤선	정무수석 (2014.6.12. ~2016.9.5.)	-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옹호·세월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지원한 책임	재판중
	김재원	정무수석 (2016.6.8. ~2016.10.30.)	-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 - 청와대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2014.7~2015.3.) 비서실장 (2015.3~2016.5)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청 와 대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2015.3-2016.11)) -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장들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세월호 가족 등을 핍박한 의혹	
	이원종	비서실장 (2016.6~2016.10.)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2015.1.26. ~2016.5.15.)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원장
	홍남기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2015.2. ~ 2016.1.)	-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국무조정실 실장
	최재영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2016.02~2017.)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청 와 대	김상률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2014.12~2016.06.)	-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성우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2015.02~2016.10.)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14.06.~2016.05.) 정책조정수석 (2016.05~2016.10.)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재판중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013.2~미상)	- 특조위 내부자료를 빼내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에 제공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하고 매도하도록 사주한 책임 - 기타 극우보수단체들을 사주 하여 피해자가족들을 모독 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	
국 무 총 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3.3.~2015.6.) 국무총리 (2016.6.~2017.5.) 대통령 권한대행 (2016.12. ~2017.5.)	-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맡은 지검장에게 전화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책임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요 증거인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임의로 지정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	

분류	성명	참사 당시 직책 및 지위	주요 행위	현직 (2017.09.30.현재)
국 정 원	성명 불상의 다수		- 참사 두 달 뒤인 2014년 6월 경 '<u>*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JTBC 2016. 9. 16일 보도)</u>' 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보수단체를 통한 여론전을 펼쳐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그 후 국정원의 활동 등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2기 특조위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	

Ⅲ. 기관 구성원별 특조위 방해 행위 및 책임

1. 해양수산부

■ 유기준

-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석한 책임
-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유기준은 2015년 3월부터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되었다. 2015년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하여 특조위의 임기일을 2015년 1월 1일로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당시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시행령 논란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발언을 하자 유기준이 “특조위 활동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경과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을 못 쓰는게 돼 주무부서인 해수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축소시켰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되고 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구성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1월 1일을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날로 해석함으로써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6개월 이상 무력화시켰다. 특조위를 발족시키기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여당과 기관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적정성-소위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의결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대응지침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에는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의 ‘집단퇴장과 항의 기자회견, 필요시 특조위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등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다. 이러한 소위 ‘해양수산부 문건파동’은 2015년 11월 19일 언론사의 보도로 밝혀졌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지시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유기준 장관 재직시절 작성되었다.

유기준은 특조위 조사방해와 인양기술TF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책 부실조치 등에 책임이 있다. 인양업체가 상하이셀비지로 선정된 경위, 각종 절단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 및 과정의 적절성, 인양연기 및 기술검토TF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주체 및 이유,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의 적절성, 해수부의 상하이셀비지 관리감독 내용 및 적절성, 미수습자 유실방지책 실행과정의 적절성 과 더불어 해수부 장관의 책임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김영석

- 차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장관 재직 기간 중 특조위를 강제 폐쇄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김영석은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참사 당일 청와대상황실에서 해경과 전화하며 생존가능성을 2시간으로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유효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김영석은 세월호 참사이후 제11대 해수부 차관(2014. 8. 4 ~ 2015. 10. 2), 제19대 해수부 장관(2015. 11.12. ~ 2017. 06. 15.)직을 역임했다. 김영석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관으로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방해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조위의 파견공무원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빼내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

2015년 11월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를 시도할 경우 특조위내 여당 추천위원들의 전원사퇴를 지시한 해수부 비밀문건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자가족들과 시민들,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합당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또, 특조위의 세월호 인양현장 실지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조사를 방해하였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훼손 가능성과 실패가능

성이 높은 인양공법에 합의하여 인양 지연을 시킨 책임이 있다. 이후에도 인양공법을 변경하고 인양 전후 선체 훼손을 묵인하여 증거기록을 훼손한 해수부의 행위, 유실방지망을 처리를 하지 않고 선체를 인양하여 미수습자 유실 가능성을 높인 해수부의 행위 등에 책임이 있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대표는 “(임씨가 자신에게)‘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나간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 박준권

-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 검토’를 핑계로 5개월간 지연시켜 인양을 방해한 의혹

박준권 전 해수부 항만정책국장(중앙사고수습본부 세월호인양지원반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말 선체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서도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5개월간 고의적으로 인양지연을 하였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 제3세션> 청문결과에 의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1일 인양 컨설팅 업체인 영국 TMC와 계약을 맺고 5월 23일 국내외 7개 인양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7개 업체의 인양 방식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뒤 대안방식을 제시했는데, 당시 제시된 방식이 정부가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 직후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가동한 선체처리기술검토TF의 최종 결론과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인양이 늦어지면서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채 강제종료를 맞이했다.

■ 연영진

- 2015.11.19. '해수부 비밀문건' 소지하고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의혹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은 '특조위의 BH조사건 관련'에 대한 여당 추천위원들의 대응 행동지침을 골자로 한다. 여당 추천위원은 문건이 지시한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연영진은 이 문건을 소지하고 국회에 전달한 장본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조 1>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1. 특조위 내부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원회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회 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2.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
3.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

이 문건은 당시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차관보)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새누리당의 안효대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에 보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나 해수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연영진이 상부로부터 특히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아래로는 세월호특조위 파견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연영진은 세월호 조사 방해뿐만 아니라 인양에 있어서도 책임이 크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이었던 연영진은 선체 인양과정에서 부력 확보 작업에 대한 기술적

일반 평가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두어 인양 지연의 원인이 되게 한 일에 책임이 있다. 또한 해수부가 상하이셀비지에 건네준 자료도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상하이셀비지(SSC)는 해수부가 잔존유 위치 등 몇몇 자료를 부정확하게 전달해 작업에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인양과정에서 해수부는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중요한 증거인 선체를 훼손하는 작업방식에 여러 차례 동의했다. 인양 과정에서 선체 절단 내역과 절단 사유의 적절성, 선수들기 과정에서 대형 파손에 대한 준비의 적절성(2016년 6월 13일), 해수부의 선미램프 개방 인지시점 및 증명자료에(ex. 잠수기록 및 동영상 및 sona 등) 관련 조사는 책임자인 연영진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인양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해수부 내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유실방지망의 부실설치, 부력확보 작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 부족 등의 문제점이 특조위 2차 청문회 4세션에서 밝혀졌다.

해수부는 ‘지난해 수색 종료 및 해경 등의 폐쇄조치 이후, 현재까지 우리부에서 실시한 유실방지장치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라는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2017년 인양과정에서도 유실방지장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해수부는 이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 없이 계속해서 인양을 진행시켰다.

부력제 방식에 대해 TMC 보고서, TF의 선체처리 기술검토 최종보고서, 그리고 다수의 민간전문가들이 부력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부력제 방식이 강행되었다. 상하이셀비지에 해수부가 건내준 자료도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3차 청문회에서 해수부관계자들은 2014.12.5.에 잔존유를 회수 완료했고 TMC가 이를 검수했다고 증언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잔존유가 유출되었다. 상하이셀비지(SSC)의 지엔양 부사장이 해수부가 잔존유 위치 등 몇몇 자료를 부정확하게 전달해 작업에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인양방식

➔ **부력제 방식**

서울대학교

그림 4-12. 부력제를 사용한 측면 인양 방법의 개념도

4.4.2. 부력제를 사용한 측면 인양 방법의 분석

가. 장점

- (1) 크레인 인양의 표고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
- (2) 부력의 조율으로 많은 수심에서의 이동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음

나. 해결 과제

- (1) 부력 제어 방안 필요
- (2) 부력에 작용 시 부력에 의한 선박의 횡방향 부력 분포를 고려할 자세 계산 필요
- (3) 부력에 동기를 제공하는 수중에 따른 인체의 자세 변화 계산 필요
- (4) 부력에 인체를 위해 인체 내부로 접근해야 하는 방안 필요

다. 위험도

- (1) 분명, 생각, 예상치, 위험, 예상치, 인체의, 자세, 불안정함, 인체의, 위험

라. 사례

- (1) 수중에서 부력제를 사용한 사례는 없음

**부력제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정할
위험도가 높음**

출처 : 세월호특별참사위원회 2차 청문회자료

인양과정에서 해수부는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중요한 증거인 선체를 훼손하는 작업방식에 여러 차례 동의했다. 인양 과정에서 선체 절단 내역과 절단 사유의 적절성, 선수(뱃머리) 들기 과정에서 대형 파손에 대한 준비의 적절성(2016년 6월 13일), 해수부의 선미램프 개방 인지시점 및 증명자료(ex. 잠수기록 및 동영상, 음파탐지결과물 등)와 관련 책임자인 연영진, 이철조, 김현태, 장기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체인양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모든 과정을 세월호특조위와 유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조사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해 왔다. 특조위와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선체의 부분절단, 인양방식과 작업공정 변경, 인양일정의 변경, 미수습자 수습계획 등 중요사안에 대해 어떠한 사전 정보 제공도 없이, 사후에 해수부가 취사선택해서 제공한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 받아 왔다. 선체인양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선별된 정보만을 특조위에 제공한 해수부의 행위는 조사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해수부가 어떤 이유로 특조위에 인양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인양과정에서 선체훼손이 조사방해를 위한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수부 파견공무원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자>

■ 김남규(초기 파견자)

- 설립준비단 초기파견자로서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준비단장(위원장) 허락없이 해수부로 복귀하여 설립준비를 방해

김남규는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수부 파견 공무원(서기관)이다. 김남규는 ‘세월호 조사위원 임명’단계에서 설립준비단에 파견되어 준비를 하였어야 하나, 특조위 조대한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위원 임명 절차 등의 설립 준비를 하지 않고 설립준비단장(위원장) 등의 허락 없이 해수부로 복귀해 특조위 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설립을 준비하던 2015년 1월말부터 특조위 활동 기한관련 법제처 해석을 유보하고 철회하게 한 의혹이 있다.⁵⁾ 김남규의 특조위 조사방해 활동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으로 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임현택

- 보수단체(태극의열단) 대표를 사주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임현택 운영지원담당관은 공무원 직권 남용과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던 인물이다.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택 대표는 임현택이 자신에게 유가족인 홍영미씨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참조2)

이후에도 임현택은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연영진이 국회에서 지참했던 해수부 대응 문건의 내용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 행동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내부 사정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단체를 시켜 피해자인 유가족을 고발하고,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임현택의 특조위 방해활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이상문

- 2016년 6월 이후 청문회 지원, 인사지시 등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특조위 강제폐쇄 실행 책임

5)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랐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출처 : 뉴스타파 2016년 10월 4일자 [<http://newstapa.org/35224>])

- 특조위 전원위원회 결정에 반하여 특조위 기록이관을 서울시가 아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한 책임

이상문 운영지원담당관은 2016년 9월 30일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이후 2016년 10월 1일부터 세월호 특조위 잔존사무 처리기간이 개시되고 사무처장이 부재함에 따라, 사무처장 직무대리로서 세월호 특조위 잔존사무 처리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박근혜정부가 특조위를 강제종료한 2016. 6. 30. 이후인 2016. 7.에 별정직 공무원들의 재직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한 면담에서 공무원 재직을 인정하라는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가 부당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문은 2016년 6월 이후 인사지시 불이행, 청문회 지원 등 위원장 지시를 불이행 하고, 정부 전상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운용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정황 등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 지시에 따라 강제폐쇄 업무를 하였다. 또한 특조위 기록이관과 관련하여 특조위 전원위 결정과 반하여 서울시가 아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다.

이상문을 조사하여 해산과정에서 해수부-청와대의 지시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특조위 강제폐쇄 전 과정과 누구 지시로 진행하였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 이시원

- 2016년 11월 이후 특조위 홈페이지 폐쇄,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 등 특조위 강제폐쇄 실행 책임
- 특조위 전원위원회 결정에 반하여 특조위 기록이관을 서울시가 아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한 책임

2016년 11월 17일 이시원 서기관이 파견되어 운영지원담당관 겸 사무처장 직무대리로서 세월호 특조위 잔존사무 처리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특조위 기록이관과 관련하여 특조위 전원위 결정과 반하여 서울시가 아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다. 특조위 대국민 공개기록이 있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특조위와 유가족을 폄하하는 내용의 특조위 청산백서를 발간하였다. 어떤 경위를

통해 누구의 지시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불순한 의도의 청산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정문수

- 특조위 내부 문건을 해수부에 불법 유출한 책임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에 가담한 의혹

정문수는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 신분으로 특조위 내부 문건인 '세월호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수신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관계자를 포함시켜 유출하였다(참조3). 또한 특조위 강제폐쇄 전후 별도의 청산백서 발간에도 관여했다.

여당 위원의 특조위에 대한 행동지침이 담긴 해수부 문건 작성에 개입 여부, 특조위 강제폐쇄 전후 별도의 청산백서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청와대-해수부간의 지시-이행 소통체계와 내용, 파견공무원의 역할과 영향 등을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 해경

■ 이춘재

- 참사 당시의 교신내용인 TRS(주파수공용통신)등의 음성파일이 담긴 해경통신서버에 대한 특조위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실지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책임

이춘재는 2016년 해경전체총괄 조정관으로 특조위의 조사협조요청에 불응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청)에 참사 당시부터 수색 종료 시까지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녹음파일 등이 해경통신서버에 100만개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조위에서 확인하였다. 특조위는 해경 측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경은 제출을 거부하였다. 특조위는 관련 교신음성 저장장치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 2016년 5

월 27일 실지조사를 실행하러 갔으나 해경측은 실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조위조사관들은 한 달 가량을 인천에 위치한 해경본청에서 버틴 끝에 TRS일부를 받아올 수 있었다. 이는 명백한 조사방해로 당시 해경전체총괄 조정관이었던 이춘재를 조사해 누구의 지시로 특조위에 TRS반출을 거부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조대환

- 특조위가 '세금도둑'이므로 해체해야 한다고 비난 후 사퇴
- 특조위 내부 자료 유출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공동 집필자

<조대환의 발언 및 이메일 내용>

- ✓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이 수시로 유가족이나 시민사회단체와 유착했고, 별정직 공무원 중 4~5급 합격자 대부분을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채우는 등 위원장이 채용을 좌지우지했다."
- ✓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며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곳이었다."
- ✓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흑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도둑이 분명하다."
- ✓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한다."

조대환은 여당 추천으로 2015년 3월부터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특조위 부위원장이면서도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고, 무단결근을 하며 특조위 부위원장으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수시로 내부정보를 유출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여론을 이용해 특조위를 공격했다. 조대환은 2015년 7월 특조위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11월 28일에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혀 있다. 조대환은 메모대로 부위원장이 됐고, 특조위의 조사 방해에 앞장섰다.

또한 2016년 12월에 작성된 특조위청산백서에 부록으로 포함된 ‘운영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 유가족과 특조위에 대한 왜곡·비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 대표집필자는 황전원 전 특조위 상임위원이었고,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등 당시 여당 추천위원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청산백서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전 정권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 방해의 ‘공로’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 이현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
- 특조위 내부자료 유출

2015년 7월 조대환에 이어 특조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현은 특조위의 조사방해에 앞장섰다. 2015년 11월 청와대의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을 조사하는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특조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원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현은 2016년 2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에 가깝다”, “본래 취지와 달리 특조위가 정치세력화 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세금도둑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현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언론보도⁶⁾를 통해 밝혀진 해양수산부의 ‘대응방안 문건’에의 ‘활동지침’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해수부 문건에는 ‘해수부 장관 내

6) 머니투데이 2015.11.19. [단독]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 시 여 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

정자 및 차관 부위원장간 면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헌이 문건의 내용과 같이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김영석을 9월, 10월에 만났던 사실이 이후 밝혀지기도 했다.

이헌은 11월 6일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서 특조위 상임위원이 박수를 치는 내부 동영상을 공식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보냈다. 하태경 의원과 새누리당은 이를 문제삼아 해당 상임위원과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고, 이후 특조위 내부 파견공무원이 보수단체에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해수부가 특조위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특조위 방해에 대한 행동지침을 문건화하고, 이헌 등 조사대상자들이 이를 실행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이헌은 2016년 5월 박근혜 정권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 황전원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황전원은 다른 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해수부 지침에 따라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 대해 반발하며 19차 특조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위원직을 사퇴했다.

황전원이 특조위 위원이면서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황전원은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사퇴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중도하차했다. 새누리당은 2016년 5월 중도사퇴한 이헌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황전원을 추천,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황전원은 또한 2016년 12월에 작성된 특조위청산백서에 부록으로 포함된 '운영보고서'의 대표 집필자로 청산백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운영보고서에는 유가족과 특조위에 대한 왜곡·비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는 황전원외에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등 당시 여당 추천위원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 고영주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고영주는 다른 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해수부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정상적인 절차로 통과된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 대해 반대하며 전원 사퇴 표명,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영주는 2015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직을 맡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현재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으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2016년 12월에 작성된 특조위청산백서에 부록으로 포함된 '운영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 유가족과 특조위에 대한 왜곡·비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 대표집필자는 황전원 전 특조위 상임위원이었고,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등 당시 여당 추천위원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청산백서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 석동현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석동현은 다른 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해수부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정상적인 절차로 통과된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 대해 반대하며 전원 사퇴 표명,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동현이 특조위 위원이면서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6년 12월에 작성된 특조위청산백서에 부록으로 포함된 '운영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 유가족과 특조위에 대한 왜곡·비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 대표집필자는 황전원 전 특조위 상임위원이었고, 조대

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등 당시 여당 추천위원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청산백서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 차기환

- '해수부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차기환은 다른 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해수부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정상적인 절차로 통과된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 대해 반대하며 전원 사퇴 표명,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차기환이 특조위 위원이면서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기환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와 201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에서 활동을 해왔다. 차기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특례입학, 보상, 진상규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성 글을 전파해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연루 대리기사 복행사건'에서 대리기사의 변호를 맡으면서 유가족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작성된 특조위청산백서에 부록으로 포함된 '운영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 유가족과 특조위에 대한 왜곡·비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 대표집필자는 황전원 전 특조위 상임위원이었고,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등 당시 여당 추천위원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청산백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물어야 한다.

4. 청와대

■ 박근혜

-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최소 7시간 30분 이상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 이를 감추기 위한 최초 상황 보고 문서 조작, 위기관리지침 불법 개정 등을 묵인하고 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
- 각종 조사 방해와 탄압행위 등 권력남용행위를 주도하거나 묵인한 책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

10:22 안보실장에게 지시사항 전달,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선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10:30 대통령-김석균 통화.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14:57 대통령, 안보실장에 전화. 구조 인원 통계혼선 관련 재차 확인 지시

15:00 대통령,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17:15 대통령 중대본 방문하여 현장 지시

그러나 실제 17:15 중대본 방문과 지시내용 이외에 어떠한 내용도 확인된바 없다. 박근혜는 세월호가 이미 전복된 10:30경,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의례적인 지시만 하달한 채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2017년 10월 12일 문재인 정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참사 이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된 시각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위조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사후변경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참사 당시 책임있는 컨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은폐하려 하였다. 위조된 보고서와 ‘지침’에 따른 허위사실이 국회와 법원에 증거 또는 답변으로 제공되었다.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

또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

또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든 은폐, 조작, 진상규명 방해, 위증 행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간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은 인정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조사대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진상규명의 시작이자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다.

■ 김기춘

- 참사당일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비롯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
-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사후변경할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책임
- 기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에 명시된, 세월호 관련 각종 여론 조작, 피해자-시민 탄압, 특조위 구성 및 조사 방해 등 각종 공권력 남용 행위

김기춘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참사 당일 10:30~11:23경 완전 전복된 세월호 내에 여전히 300명 가량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긴급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구조를 위한 대책회의,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심지어 비서실장 본인의 동선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7년 10월 12일 문재인 정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또한 참사 이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된 시각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위조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사후변경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참사 당시 책임있는 컨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은폐하려 하였다.

또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참사 직후 △ 유병언 일가로의 이

슈 전환 △ 세월호 인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 제시 △ 유가족에 대한 사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특조위 활동 방해 등을 불법부당하게 지시하고 사주한 정황이 확인됐다.

2. 세월호 참사-원인
 { 선장 선원의 배반적 유기 행위 ○ 해경 초동 구조작전의 실패
 ○ 유병언 일당 탐욕(배 수선, 과적)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
 ○ 정부가 변명 X, 실태는 똑바로 파악

7월8일

2. 세월호 참사 원인

長

- 선장 선원의 배반적 유기 행위 ○ 해경 초동 구조작전의 실패
- 유병언 일당 탐욕(배 수선, 과적)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
- 정부가 변명 X, 실태는 똑바로 파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2014년 8월22일 : '장. '세월호 유가족(학생 유가족) 외(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合理的(합리적) 이들 入場(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中和(중화)'

2014년 8월23일 : '장.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행위.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

■ 우병우

- 2014년 5-6월, 광주지검 세월호 참사 수사팀 등에 직접 전화하여 '수사연기,'압수수색 중단' 등 부당한 압력행사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당시 검찰총장까지 동원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검 윤대진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4년 5월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루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우병우는 2014년 6월 5일 이뤄진 해경본청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역과 자료가 보관돼 있는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우병우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이 시기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은폐,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가 청와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조운선

-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옹호·세월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지원한 책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른바 ‘실행팀’으로 지목받고 있다.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을 넘어 조운선 정무수석까지 ‘관제데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구속된 조운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2014년 4~11월)’에 따르면,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2만원을 받는 탈북자 알바가 1200명 이상 동원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2,500만 원 이상이었고, 한 집회에 최대 200여 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어버이연합은 이 기간 동안 39회의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열면서 1,259명의 탈북자 알바를 동원했다.

■ 김재원

-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

- 청와대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2014년 10월 28일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재원 의원에게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長 . 7시간 전면복원-정무→김재원 의원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 언론 상대 설득, 홍보”

2016.1.16.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큰 규모로 준비되고 있다며 “세금도둑 작태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실에서 기자들에게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만든 문건을 ‘세금도둑’의 근거참고자료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문건은 특조위에서 제공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문건은 새누리당 추천 상임조사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의 지시로 해수부 파견공무원 정문수가 작성하여 조대환이 김재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문건은 김재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에도 보고되었다. 해당문건에는 주간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차주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었다.(참조3)

김재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준비단이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을 4명, 3-4급을 2명, 4급을 15명, 5급을 38명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거대 부서를 만든다고 한다”고 발언하면서 특조위가 위상에 비해 비대한 조직이며, 세금도둑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의 근거로 삼았다는 파견공무원 정문수 작성 문건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정문수가 제출한 내용은 3-4급이 2명이 아닌 1명, 4급이 15명이 아닌 13명, 13개 과가 아니라 14개 과를 개설하는 안이 있었다. 또한 원내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고, 조대환이 찾아와 문건을 전달한 것은 오전 11시쯤이었다.⁷⁾ 김재원의 ‘세금도둑’은 1월 16일보다 이전에 받은 미상의 자료를 근거로 나온 발언으로 김재원은 조대환 및 해수부파견 공무원으로부터

7) 뉴스타파 2015.1.23

터 특조위 준비단에 관련된 내용을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조사기관인 특조위를 김재원이 내부사찰한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김재원이 어떤 지시를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를 밝혀 박근혜정부의 특조위방해 개입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이병기, 이원종, 현정택, 홍남기, 최재영, 김상률, 김성우

-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불법부당한 행동을 공모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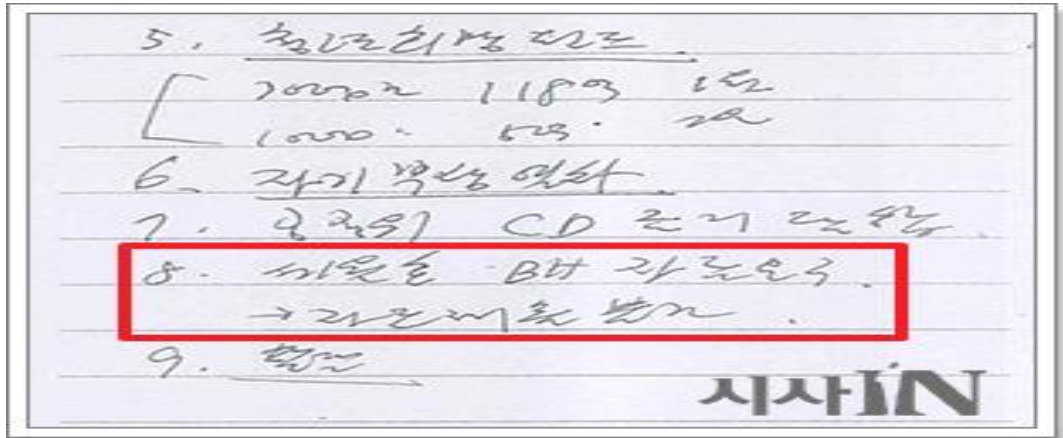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비서실장의 지시하에 정책수석, 경제수석, 민정수석,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홍보수석, 교문수석, 정무수석이 특조위 준비단계부터 개입하여 구성원 인선, 사건 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양수산부를 통해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강제종료 시켰음이 드러났다. 특히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막았다.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일탈이고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7시간에 대한 조사 차단을 지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세월호참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교조,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단체 활동도 저지하려던 정황도 함께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하의 청와대 구성원들이 어떤 이유로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안종범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5년 7월 19일에서 2016년 10월 28일까지

의 대통령 지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티타임 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겨 있다.



‘8. 세월호 BH 자료 요구

→ 자료 제출 불가

메모의 8번 항목은 특조위가 청와대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거부를 지시하는 내용이다. 2015년 12월 13일 업무수첩에 기록된 1번 안건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였다. 안종범,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의 특조위에 대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방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조위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조사활동을 방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허현준

- 특조위 내부자료를 빼내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에 제공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하고 매도하도록 사주한 책임
- 기타 극우보수단체들을 사주하여 피해자가족들을 모독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

허현준은 박근혜정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보수 단체를 지원하고 관

제데모를 지시했다. 특조위와 유가족의 영상을 특조위 부위원장 이현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유총연맹 측에 주고 영상에서 보수세력이 부정적으로 생각할만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허현준이 자유총연맹 측에 전달한 영상은 2015년 11월 6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416 진상규명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촬영된 유가족 홍 모 씨의 발언이었다. 홍 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기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현준 메시지 내용>

“보내드린 영상은 특조위에서 보내준 영상이라 당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월화쯤 공개를 추진하려 하는데 그후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내용은 이미 공개됐으니 텍스트로 활용해 주십시오.”(2015년 11월 20일)

“세월호특조위 유가족 홍○○씨의 모독발언은 어제 mbc보도와 하태경 의원 영상 공개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활용하셔도 됩니다.(출처: 하태경 의원)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홍○○씨는 모자이크 처리해야 민사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군요.”(2015년 11월 24일)

“공직자(차관급)인 세월호특조위 박종운 위원이 홍씨의 대통령에 대한 극악 발언에 동조하며 박수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2015년 11월 24일)

출처: 뉴스타파

허현준은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출처를 어디로 할지, 자료 활용시 법률자문까지 상세하게 자유총연맹에 전달했고, 자유총연맹은 이 내용을 전달 받은지 이틀만에 특조위를 해체하라는 성명을 냈다.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를 어떻게 조직하고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청와대의 특조위 진상규명방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 질 것이다.

5. 국무총리실

■ 황교안

-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맡은 지검장에게 전화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책임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요 증거인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임의로 지정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사실상 조사 방해와 검찰청법 위반,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검찰 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황교안이 법무부를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해경 등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혐의를 축소하도록 한 정황은 이미 언론보도⁸⁾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황교안과 법무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당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황교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들을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이관해 진상규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있다.

6. 국정원

■ 성명불상의 다수

- 참사 두 달 뒤인 2014년 6월 경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JTBC 2016. 9. 16일 보도)'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보수단체를 통한 여론전을 펼쳐야'한다고 제안.

8) 한겨레 2017.05.29.보도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JTBC는 2016년 9월 16일 보도에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여객선 사고가 하반기 국정발목을 잡는다”와 “국민들의 성급하고 높은 기대감 걸림돌”이라는 문구들이 들어 있으며,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내용이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단체를 통해 여론전을 펼쳐야’한다고 제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의 작성일은 참사 두달뒤인 2014년 6월 18일 전후로 방송사는 특정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의 활동을 무력화 시도했고, 보수단체체를 동원해 정부를 옹호하고, 세월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지급하기도 했다. 여당의원과 관련기관을 통해 세월호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모는 부정적인 언론공작을 펼쳤다. 일련의 특조위방해 내용들은 앞서 2014년에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내용과 동일하다. 세월호특조위 준비단 시절 특조위에 대한 내부사찰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때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해수부파견공무원 정문수의 발신내역을 보면 청와대,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로 되어 있다. 여기서 ‘방배경찰서’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 방배경찰서는 해당 문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정황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소속 ‘적폐정산TF’에서 밝혀진 국정원의 댓글부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세월호특조위의 진상방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조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국정원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국정원의 특조위 무력화에 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조1)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중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

◇ 특조위의 ▲선제 조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활동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

1. 특조위의 BH 조사 건 관련 : 적극 대응

☐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 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 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권영빈, 야당 추천)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참사 당시 VIP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여당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다수결)^{**}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
- 특별법 제6조제1항(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국회의원 10명(여당 5, 야당 5), 대법원장 지명 2명, 헌법 지명 2명, 유가족 선출 3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 특별법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 특조위 운영규칙 제14조 : 위원회 회의록은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회의록의 경우,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제출 여부 결정

2. 특조위의 세월호 선제 조사 관련 :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협조

☐ (수중조사) 이미 특조위와 협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인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

the 300

- 1 -

- ☞ 활동기산일 관련 우리부 입장(일반장 수여일, 3.9) 관찰시, 증액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우리부의 의견을 전달

< 참고 : 상임위 소위 특조위 '16년도 예산 심의 결과 >

특조위 요구액	정부안(A)	증액(B)	감액(C)	심의결과 (A+B-C)
198.8	61.7	61.2	0.5	122.4

- (부대의견) 활동기간 6개월 연장시, 인건비 18억 2,700만원(月 3억 450만원)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22억 650만원(月 3억 6,775만원) 등 총 40억 3,350만원 추가 증액

4.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 (특조위-정부간) 해수부-특조위 여당추천위원간 협조·소통채널 강화

- BH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既 협조요청
- 해수부 차관-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간 추가 면담을 통해 동 조사
건 관련 제차 협조요청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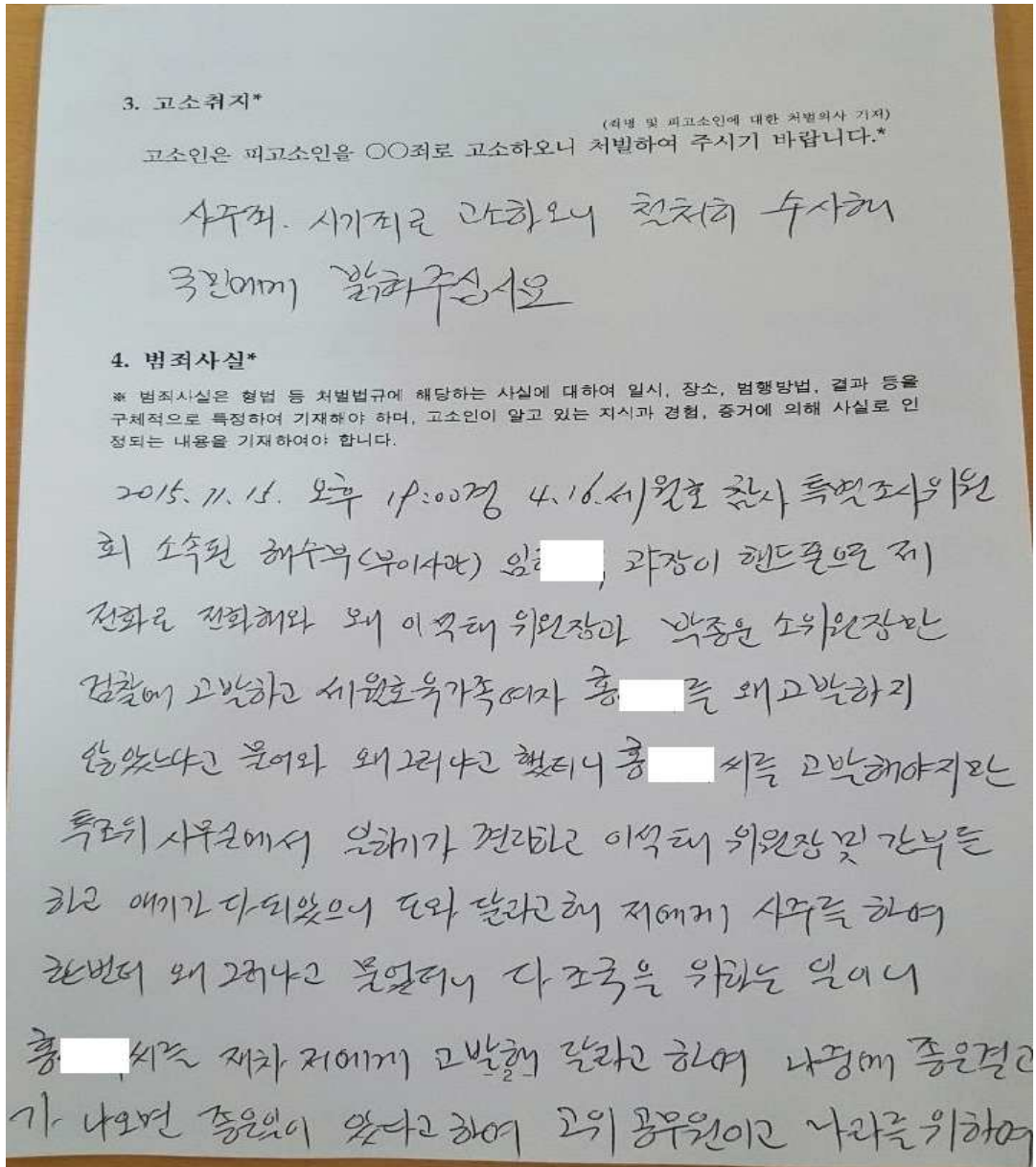
-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매주 월, 수 : 11.9, 11.11)시 등 건이
11.16일 특조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

□ (특조위 내) '부위원장(사무처장)-여당추천위원 및 파견공무원'간 소통 강화

- (여당추천위원) 정례 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 (파견공무원) 사무처장으로서, 주요 파견 간부(행정지원실장, 기획
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 11월중 파견 예정)와의 소통 강화

the 300

(참조2)



미디어오늘, 2016. 1. 26.

(참조3)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 2015년 3월 20일 기준 >

1. 업무 추진실적 (3.16 ~ 3.20)

- ① 진상규명 소위원회 실무점검 회의(3.16, 15:00, 사무실)
 - 오하마나호 시찰 계획 작성 등
- ② 임시 홈페이지(416commission.kr) 개통(3.17)
 - 416commission.go.kr로 다음 주 전환 예정이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검토 중(3.20)
- ③ 진상규명 소위원회 준비회의(3.17, 16:00, 사무실)
 - 진상규명 소위원회 운영방안 및 업무내용, 세월호 인양계획과 관련한 의견수렴, 오하마나호 시찰 관련 논의 등
- ④ 지원 소위원회 준비회의(3.19. 08:00, 국립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
 - 소위원회 업무 범위 및 계획 협의 등
- ⑤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신현호 위원 동행) 안산 방문(3.19, 14:00~18:00)

- (14:00~16:00) 단원고, 온마음센터(트라우마센터)
- (16:00~18:00) 안산 지역공동체 치유와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 * (주최) 국회의원 부좌현 · 전해철, 안산시, 경기교육청, 416가족협의회 공동

⑥ **진상규명 소위원회 실무점검회의**(3.19, 15:00, 사무실)

- 진상규명 소위원회 준비, 토의 및 보고자료 점검 등

⑦ **안전사회 소위원회 준비회의**(3.19, 15:30, 사무실)

- 안전사회 소위원회 업무 범위 및 계획 협의 등

⑧ **진상규명 소위원회 오하마나호 시찰계획 수립 보고**(3.20)

- (목적) 세월호와 유사한 선박인 오하마나호를 시찰하여 위원회 위원 및 근무 직원들의 세월호 선박 구조 등에 대한 이해 도모
- (협조) 오하마나호 시찰과 관련하여 선박 구조 설명 공무원 협조(인천 해양수산청), 항만 출입 관련 협조(인천항만공사) 요청 문서 시행

* (일시 및 장소) 3.26.(목) 10:00~15:00, 인천 항동소재 내항 1부두

** (참석) 위원 8명(위원장 포함), 근무 직원(9명)

⑨ **대검찰청, 해양수산부 등 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보고**(3.20)

- (대검찰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건의 처리현황자료(3.17)
-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의 추진현황 자료 등

* (향후 추진일정) 현장조사보고서 완료(3월중), 기술검토 최종보고서 마련·발표(4월중)

⑩ 예비비 요구(안) 관련 기재부 질의·답변 자료 수정·보완(계속)

⑪ ‘사무실 설치공사’ 추진(계속)

- 위원장실, 진상규명 소위원회장실, 조사실 등 방음 벽체 설치, 기타 업무공간 구획 확정 및 전기·소방공사 등 추진

⑫ 검찰,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대한변협 백서자료 검토(계속)

⑬ 4·16세월호참사 1주기 관련 주요 행사 계획 취합(계속)

- 세월호 참사 1주기 관련 정부 주관·민간 주도 행사계획 취합

2. 업무 추진계획 (3.23~3.27)

① 진상규명 소위원회 실무점검회의(3.23, 15:00, 사무실)

- 위원회 보고사항 및 진상규명 소위원회 준비회의 점검 및 토의 등

② 안전사회 소위원회 준비회의(3.23, 15:30, 사무실)

- 안전사회 소위원회 업무 계획 논의, 위원 제안 의견발표 및 토론 등

③ 진상규명 소위원회 준비회의(3.24, 16:00, 국립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

- 소위원회 업무계획 등 토의 및 보고 예정

④ 지원 소위원회 준비회의(3.25, 08:00, 사무실)

- 소위원회 업무 범위 및 계획 등 협의(계속)

⑤ 제2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3.26)

- 상정 의안에 대한 의결 및 오하마나호 시찰계획(안)등 보고

* (일시 및 장소) 3.26.(목) 08:00~10:00,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

** (참석) 위원 17명(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12명)

⑥ 진상규명 소위원회 주관 오하마나호 시찰(3.26, 10:00~15:00, 인천내항)

⑦ 진상규명 소위원회 진상조사 계획 및 과제 준비(계속)

- 진상규명 소위원회 조사 계획 및 세부 방안 준비

- 검찰·해양심판원·감사원·국회 등 조사 발표 자료 분석·검토

- 조사규칙 등 진상조사 관련 제 규칙 검토 등

⑧ 예비비 요구(안) 관련 기재부 질의·답변 자료 수정·보완(계속)

⑨ ‘사무실 설치공사’ 추진(계속)

- 사무실 구획 공간에 대한 벽체 설치 및 전기·소방공사 등 추진

-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급 가구 및 사무용 가구 발주·제작 등

(참조4) JTBC 보도 기사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첫 보고시점 '30분 뒤로' 조작"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3459

(JTBC, 2017.10.12.)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더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지금까지도 묻는 이유는 대통령 또 국가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점은 당초 알려진 오전 10시가 아니라 9시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 반의 의혹으로 고쳐불러야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해서 검찰과 법원, 심지어 탄핵심판에까지 이용하고, 무엇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모두를 속였습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이 또다시 참담한 정당성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라고 명시돼 있는 규정 역시 세월호 이후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라고 몰래 바꿔 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혹은 규정 자체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손글씨로 고쳐냈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에 첫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작은 참사 발생 6개월 뒤였던 2014년 10월 23일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지난 정부 청와대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보고를 받은 지 15분 만인 오전 10시15분에 첫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45분 만에야 첫 지시를 내린 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보고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이에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조작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현 청와대가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란 지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단독] 박 청와대 '세월호 대응 문건' 입수..."7시간 조사 막아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3451
(JTBC, 2017.10.12.)

이런 가운데 저희 JTBC는, 의혹이 가득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반이 파헤쳐지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인데, 7시간 반에 대한 조사를 막으라는 비서실장의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내용입니다.

201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월호 사고 당일 VIP, 즉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지시가 많습니다.

세월호특조위가 이를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건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인 만큼, 해수부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협의해 대응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러고도 특조위가 포기하지 않자 해수부에 책임을 지우면서 조사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7시간 조사는 일탈이고 월권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11월 말에는 "VIP 행적 조사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공동대응을 청와대 전체에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라는 지시는 특조위 활동이 막바지였던 2015년 말 한 달여 동안 여섯 번이나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 아래 여당 추천 특조원들은 표결을 보이콧해가면서 7시간 행적의 조사를 가로 막았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